

# 물가폭등,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

## 1. 현 황

-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.7%(전년동월대비)를 기록한 데,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.0%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
- 지난 12월의 3.5%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.5%, 3월에는 4.7%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, 3월 농산물 가격(14.9%)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, 석유류 가격(15.3%)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
-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%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
-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,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

[표 1]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변화 추이

( 전년동월 대비 )

	2010년				2011년		
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월
소비자물가상승률	3.6	4.1	3.3	3.5	4.1	4.5	4.7
▪ 석유류 가격상승률	3.4	7.3	5.0	8.3	10.9	12.8	15.3
▪ 농산물 가격상승률	32.7	37.0	28.7	26.5	24.4	17.7	14.9
생산자물가상승률	4.0	5.0	4.9	5.3	6.2	6.8	8.0
수입물가상승률(달러 기준)	12.6	13.0	11.9	14.5	14.1	16.9	-

자료 : 한국은행

### ○ 주택정책에 있어 시장실패와 정책실패에 따른 전세대란 발생

- 주택공급에 있어 기업의 수익논리는 서민의 실수요 평형대는 과소 공급하는 반면,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이 과잉되는 등 시장실패(Market failure)현상이 발생하여 전세난 가중
- 2010년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(종합) 총수는 88,706채로 2008년 165,599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미분양율을 보이며, 특히, 건설사의 재정을 악화시키

는 완공 미분양은 2011년 1월 현재 43,207채로 민간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, 85㎡ 이상 중대형이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<표 2>

[표 2] 아파트 공사완료 후 미분양 현황

		2008.1	2009.1	2010.1	2011.1
계	계	22,162	48,534	48,469	43,207
공공부문	소계	947	408	3	0
민간부분	소계	21,215	48,126	48,466	43,207
	60㎡이하	2,500	3,497	3,618	2,268
	60~85㎡	12,757	26,190	20,450	12,144
	85㎡초과	5,958	18,439	24,398	28,795

자료 : 통계청

○ 또한 무분별한 재건축, 재개발 정책에 따른 주택멸실과 전세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정책실패의 성격을 가짐

-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과 동시다발적 대규모 개발은 광범위한 주택멸실과 전세수요를 급증시켜 전세의 수급불균형을 야기

[그림 1]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(전국)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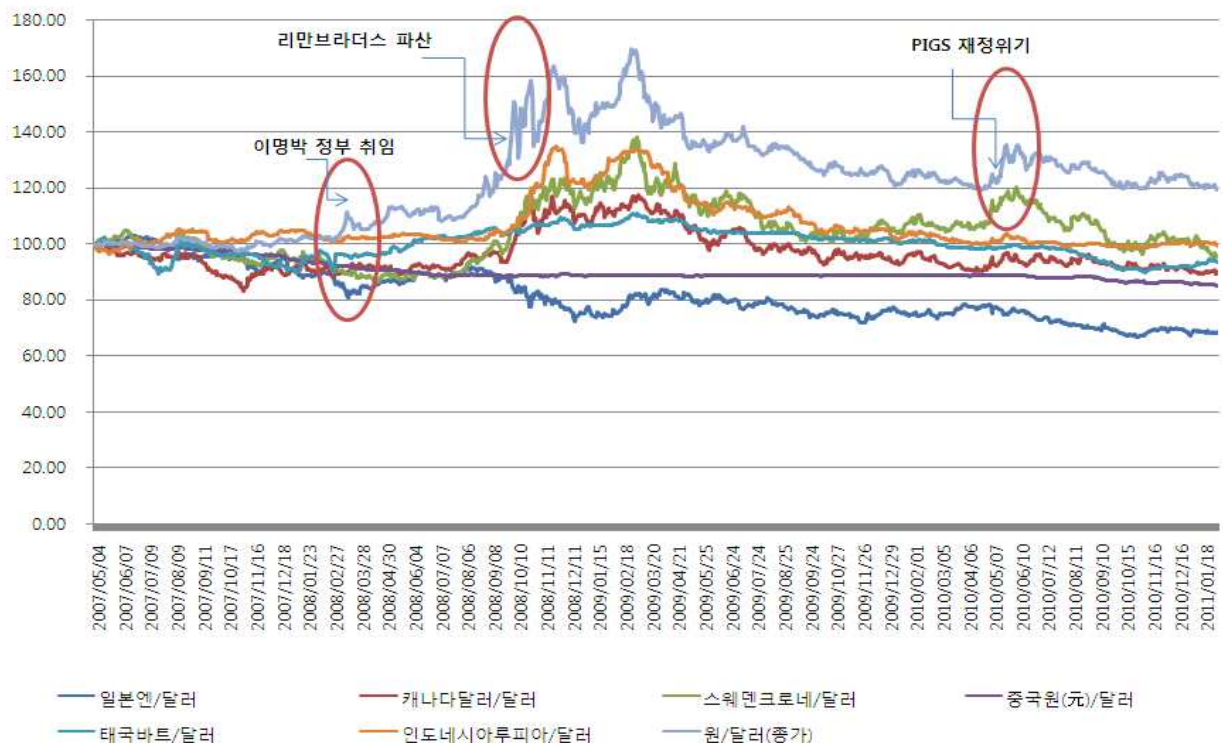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## 2.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

-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, 미국의 달러 양적완화(달러 무한공급)과 정부의 확대재정 투입이 있음
  -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,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석유 등 원자재와 식량가격이 상승하고,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이들 부문 투기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 상승이 가속
  - 또한 미국은 통화정책을 통해 천문학적인 채무부담을 중국, 일본, 한국, 중동 등 국가로의 전가를 하고 있으며, 환율정책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

[그림 2] 주요국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 추이

(2005년5월 4일 =100)



자료 : 한국은행

-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부터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,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환율 정책을 강화하는 등 물가상승에 대해 사실상 통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
  - [그림 2선]의 맨 윗선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

취임 당시에서부터 추진되었으며, 경제위기 이후 더욱 증폭되었고,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음

-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달러 대비 각국 통화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시, 경제위기가 진정된 2010년 이후 일본, 캐나다, 태국,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경기위기 이전으로 회복 또는 평가절상되었으나 한국만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

○ 물가상승이 구조화된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오기와 성과주의로 물가억제를 위한 정책 실패(失期)

- 취임 이후 이른바 747공약과 수출 중심경제 드라이브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여 스스로 물가불안을 자초하였으며,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,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‘교육투자’ 또는 ‘재분배 정책’과 같은 경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닌, ‘4대강 사업’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무모함을 보임
- 또한 경제의 체질 개선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시기에 명목 ‘경제성장율’과 건설사를 위한 ‘거품부양’을 위한 정책으로 가계부실을 심화시켜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등 금융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킴

○ 결국 물가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률 최고목표로 감세, 규제완화, 대규모 토목사업 정책과 고환율-저금리라는 거시금융정책을 골간으로 이른바 MB노믹스의 본질에 따른 결과임

- 고환율-저금리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, 서민경제는 물가상승, 전세대란에 따른 급격하게 실질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음
- 나아가 MB노믹스는 재정과 가계부채의 부실을 확대시킴으로써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 몰고 있는 상황임

### 3. 물가상승기,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

#### 1) 고환율-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

○ 최소한 고환율-저금리 정책기조를 변화시켜 대외적 물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

-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이 구조화된 세계경제 환경, 차이나플레이션(Chinaflation)이라고 불리는 중국발 물가상승 등 대외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환율-저금리 정책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정책이 아님
- 또한 4대강 개발로 인한 채소경작지 감소, 구제역 파동의 여파 등으로 말미암아 농축산물의 물가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는 대내요인이 있음
- 이명박 정부의 수출확대정책, DTI 규제 완화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‘거품부양 정책’의 지속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함

## 2)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

○ 국내 독과점 정유업, 통신업, 금융업에 대한 독점이윤 통제 및 공정거래 정책 강화함으로써 대외물가 상승이 국내 독과점 구조에 의해 물가상승이 증폭되는 현상을 시정

- 독과점 대기업은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특혜를 입은 대표적인 집단이며, 거대장차산업으로서의 정유산업, 원천적 과점시장인 통신산업에 있어 독점이윤 가격과 생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함
- 또한 막대한 사내유보금과 특혜 이윤을 누리고 있는 수출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

## 3) 노동자·서민·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

○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, 최저임금 정책 등을 통해 노동자 고용과 실질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쳐 서민의 물가인상의 충격을 완화해야 함

-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서민의 소득향상 정책 추진
- 최저임금제 개혁을 통해 현행 시급 4,110원(2010년)의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%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을 보호

#### 4) 서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

-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 재량권 행사와 국민경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, 정부,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개선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함
- 서민주택금융의 대대적인 확충 및 88%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 저금리 모기로 전환하는 등 구조개선 프로그램
-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주택공동소유 정책을 통해 급속한 중산층 외해 저지 정책
- 주택공급정책의 시장실패에 교정하는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

#### 5)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

-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사를 위한 4대강과 같은 토목개발사업에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인프라 구축, 탈석유 체제를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
-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고 통섭되는 새로운 시대에 공교육과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
-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R&D와 인력에 투자를 통해 석유의존 경제를 탈바꿈하고 세계 에너지시장의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추진